

9.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조례의 제정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청 원 인 : 장지혁
- 소개의원 : 김동식 의원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15일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9일
- 상정일자 :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5일), 채택

2. 청원 요지 및 내용(청원인 : 장지혁)

□ 청원요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정 요청.

□ 청원내용

-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가 자치단체장

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워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책임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음.

- 2010년 7월 공공감사법이 제정된 이후 충남, 세종, 서울, 광주 등에서 감사위원회가 도입되었고,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아산시 등으로 확대되었음.
- 대구시는 기존의 독립제 감사관제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받음.
- 법률적 근거의 존재, 지방자치단체 감사 혁신의 필요성의 확산 등 이제는 대구에서도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3. 청원소개건의서 요지 (소개의원 : 김동식 의원)

- 대구광역시는 8개 팀으로 구성된 감사관을 두고 있지만 행정부시장 산하에 있고, 구성원인 공무원이 순환보직 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숨방망이 처벌 비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임.
- 차제에 감사기구를 독립기구 형태의 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면 이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명정대한 양형기준과 처벌로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대구시 행정의 신뢰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임.

4. 소개의원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식 의원)

□ 소개 이유와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체감사는 지방행정의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검증하고, 자치단체 공무원 및 소속 산하기관 임직원의 부패과 비리를 견제하는 등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담보수단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를 위한 '독임제 내부 감사기구'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등에 대한 공정한 감사행정 집행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중앙정부는 2010년 7월, 자체감사기구 강화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충남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17개 광역시·도 중 9개 자치단체가 '합의제 외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합의제 외부 감사위원회는 기존, 독임제 내부 감사기구가 내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른 자율성과 독립성의 한계를 극복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제 식구 감싸기 감사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임.

- 앞서 합의제 외부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독임제 내부 감사기구에 비해 그 운영성과에서의 변화와 진보가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 대구시에도 이러한 감시기구의 변화가 필요함. 대구시는 2019년 공공기관 공직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내부청렴도가 최하 등급인 5등급에 머무는 등 낮은 공직청렴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외부 합의제 감사 기구에 의한 감사제도 운영이 필요함.

5.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의원 신록휴)

○ 본 청원은

- ▶ 독립성과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가진 감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 ▶ 청원인 장지혁이 「지방자치법」 및 「대구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거하여 김동식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임.

○ 조례 제정의 적법성 검토

- ▶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16조¹⁵⁾에서 근거를

15)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

두고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16)에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감사기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감사위원회 도입 현황

- ▶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논의과정 속에서 2006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개선방안¹⁷⁾으로서 제안되었으며, 이후 2010년 「공공감사법」 제정으로 합의제 감사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 지방자치단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2020.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2021.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감사위원회 조례 제정 현황(조례 제정순)

- (광역) 제주(2006.4월), 충남(2011.3월), 세종(2014.5월), 서울(2015.5월), 광주(2015.5월), 강원(2018.9월), 대전(2018.12월), 부산(2019.7월), 경남(2020.10월)
- (기초) 대전 서구(2015.6월), 충남 아산(2016.12월), 전북 익산시(2020.7월)

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6) 공공감사법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17)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감사위원회 설치, 지방감사원의 설립 및 지방의회 소속 감사직렬 신설 등

- ▶ 합의제 감사기구의 경우 독립제로 운영되는 기존의 자체감사 기구에 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를 살펴볼 때 당초 도입취지에 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기구로서의 권한과 체계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위원회 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함.¹⁸⁾

○ 대구시 현황

- ▶ 대구시는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감사관¹⁹⁾을 두고 있으며 8개 팀²⁰⁾으로 구성하여 개방형 직위제로 운영 중임. 이는 2010년 「공공감사법」의 제정으로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토록 의무화²¹⁾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18)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개선을 위한 이슈분석, 2017.12)

19)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보좌기관) ① 대구광역시장 밑에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을,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을 둔다.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한다.

1. 반부패·청렴정책에 관한 사항 2.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3.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4. 종합·특정·재무·성과·복무감사에 관한 사항 5. 감사원·중앙행정기관 대행감사 및 조사
6. 정부합동·감사원 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7.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8.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9. 청백-e 시스템 운영 10. 특명사항, 각종 비위첩보 및 진정민원 조사처리
11. 소속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및 경고·훈계 등 처분 12. 시정건문정보 보고제 운영 및 환경순찰
13. 보조금감사 및 주요 건설공사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14.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20) 청렴윤리팀, 감사팀, 재무감사팀, 보조금감사팀, 조사팀, 기술감사팀, 일상감사팀, 인권팀

21) 공공감사법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 ▶ 최근 대구시의 공직청렴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의회에서도 현행 감사관실을 합의제 외부 감사기구로 개편하도록 촉구하는 등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및 부서의견(제8대 대구시의회)

- (정천락 의원) 대구시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서 감사관실을 합의제 외부감사기구로 개편할 것을 촉구(5분 자유발언, 2019.7.17.)
- (김혜정 의원) 시민감사위원회 도입 검토 권고(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11.7.)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²²⁾결과(대구광역시)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합 청렴도 ²³⁾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외부 청렴도	4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내부 청렴도	3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정책고객 평가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 등급분포 : 1등급(최상) ~ 5등급(최하)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제출된 본 청원은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구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22) 대상기관(2019년 기준): 6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

조사방법: 전화·온라인 조사 진행(2019. 8월~11월 / 4개월간)

23) 종합 청렴도 산정: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하여 산정

제고하여 내부통제를 내실화하고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조례의 제정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간 시의회에서도 공직청렴도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와 노력 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원인의 청원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음.

- ▶ 다만,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등 조직편성권이 그 조례안 제안권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 청원은 시장에게 이송되어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²⁴⁾

【대법원 판결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 ➡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하여 관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속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 속한다거나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제3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행정기구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24) 대구광역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심사보고)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 고**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구 구성 시·도별 현황**

(2020. 10월 현재)

시·도	감사기구 구성 현황			비 고
	감사위원회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조례 제정일	독임제 감사관	
서울	○	2015. 5. 14.		조례 제안자(시장)
부산	○	2019. 7. 10.		조례 제안자(시장)
대구			○	
인천			○	
광주	○	2015. 10. 1.		조례 제안자(시장)
대전	○	2018. 12. 28.		조례 제안자(시장)
울산			○	
세종	○	2014. 5. 20.		조례 제안자(시장)
경기			○	
강원	○	2018. 9. 21.		조례 제안자(도지사)
충북			○	
충남	○	2011. 3. 30.		조례 제안자(도지사)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2020. 10. 8.		조례 제안자(도지사) 2021. 1월 시행
제주	○	2006. 4. 12.		조례 제안자(도지사)

6.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감사위원회 도입·운영시 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감사제도는 그대로 두어 별개로 운영 하되 현재와 같이 대구시가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
○ 청원서의 참여자 명부를 보면 중복 되는 이름이 보이는데?	○ 제대로 다시 살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음.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장단점 설명 바람	○ 감사위원회의 장점으로서는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감사 정책에 대한 시민감시가 가능함. 독임제 감사관의 장점으로서는 효율성과 신속성을 들수 있지만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
○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경우 조례 제정을 비롯해서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지?	○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모해서 상임으로 두고, 나머지는 공모하되 위촉하는 식으로 구성되고 있음.
○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예산 수반에 대해 검토된 바 있는지?	○ 외부 위원을 새로 구성함에 따른 인건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질 의	답 변
○ 청원이 시의회에 제출되었다는 자체만으로 감사위원회 도입여부 결정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낮은 공직청렴도에 따른 문제로 현행 감사 제도에 대한 비판과 공무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청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고 보는데?	○ 내부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함. 이러한 청원에 따른 제안을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청원의 처리가 집행부로 넘어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검토한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음.

※ 상세 내용은 회의록 참고

7. 심사결과

-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재석의원 전원찬성)

8. 종합의견

- 본 청원은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구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내부통제를 내실화하고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그간 시의회에서도 공직청렴도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와 노력 등이 있었으며, 조례의 제정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청원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

- 다만, 판례와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등 조직편성권이 그 조례안 제안권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본 청원은 시장에게 이송되어 처리되어야 할 것임.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첨부서류

- 제출원안 : [붙임1]

[붙임1] 제출원안

(별지 제3호서식)

청 원 요 지 서

접수년월일	2020. 10. 15		접수번호	2020-1
청 원 인	주소	대구시 중구	성 명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소 개 의 원	김동식 의원		소 위 관 회	기획행정위원회
건 명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조례의 제정			

〈 청원요지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요청함.

〈 청원내용 〉

○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가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워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책임성 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음.

○ 2010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 제정된 이후 충남, 세종, 서울, 광주 등에서 감사위원회가 도입되었고,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아산시 등으로 확대되었음.

○ 그동안 대구시는 기존의 독립제 감사관제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받음.

○ 법률적 근거의 존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혁신의 필요성의 확산등 이제는 대구에서도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청 원 서

제목: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조례의 제정

〈 청원취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정입니다.

-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가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워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책임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 2010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 제정된 이후 충남, 세종, 서울, 광주 등에서 감사위원회가 도입되었고,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아산시 등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그동안 대구시는 기존의 독임제 감사관제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 법률적 근거의 존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혁신의 필요성의 확산 등 이제는 대구에서도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에 청원합니다.



〈 조례내용 〉

① 감사위원회의 기능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0.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1. 위원의 제척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2.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1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1. 감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 명문화
2.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3. 감사위원장은 아래의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승진임용의 경우

- 휴직의 경우
- 공공감사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공감사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적극적 행정면책 명문화

③ 감사대상

1. 대구광역시 본청 및 소속기관
2.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3. 대구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4.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

④ 감사결과의 공개

1. 감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방법은 규칙으로 제정
2. 비공개사유 발생시 비공개사유와 추후 공개일시 지정

※ 첨부자료

1. 참고조례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첨부 :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례 시민청원 참여자 명부

2020. 10. 15.

청원인 :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연락처 :

첨부1)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 18.] [서울특별시조례 제6476호, 2017. 5.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제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 5.>

제3조(감사위원회의 기능)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0. 감사 생략에 관한 사항
11. 위원의 제척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12.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7. 1. 5.>

1.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 다만, 위원 2명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 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5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약정이 해지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7. 법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재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용약정을 해지하거나 위촉을 해제한다. <개정 2017. 1. 5.>

제9조(위원의 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1. 5.>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제16조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11조(감사위원회 회의) ① 감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출석 및 안전심사에 참여한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안의 작성 등) ① 제15조의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감사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관계인의 진술권)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 5.>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이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전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전의 관계인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전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제15조(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감사담당공무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5.>

1. 서울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
2.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3.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
4.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지방자치법」 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

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사무 중 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법 제27조 의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적극행정면책)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 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보고)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중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 9. 29.>]

제20조(공사·공단·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심사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 준수 여부, 자체감사 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3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중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 9. 29.>]

제21조(감사결과 등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의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미리 정하여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18.]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7. 5. 18.>]

제22조(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7. 5. 18.>]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7. 5. 18.>]

별첨 부칙 < 제5862호, 2015. 5. 14. >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부칙 제5조는 감사위원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감사위원회 규정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감사업무와 관련한 종전의 규정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거나 새로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 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의 조항 중 "감사관"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규정 등이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거나 새로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보며, "감사기구"는 "감사위원회"로 본다.

제4조(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방형으로 임용된 감사관은 이 조례의 감사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하되 임기는 당초 계약기간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부칙 < 제6350호, 201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 제6386호, 2017. 1. 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 제6476호, 2017.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